

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초판 정오표

(2023년 06월 28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는 2022년 12월 19일 발행된 “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”
초판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초판 - 정오표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3년 06월 28일 기준)

2022년 12월 19일 발행된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초판에서 추가된(보완) 내용과 수정사항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쟁점	위치	목차	줄수	수정사항
11	p. 62	3. (2)	3,5	甲 수녀원 → S 수녀원
	p. 63	3. (2)	2,4	
15	p. 80	제시문	6	<p>한편, 乙은 이미 같은 법 위반으로 2014년 5월 6일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甲이 여전히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.</p> <p>→ 한편, 乙은 이미 2014년 동법 위반으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. 그 후 2015년 5월 6일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甲이 여전히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.</p>
20	p. 107	2. (1)	3	<p>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.</p> <p>→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는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는 곳에 해당한다.</p>
30	p. 152	3	2	<p>사루적으로 → 사후적으로</p> <p>행우 → 행위</p>
32	p. 159	제시문	6	안양사 → 안양시
38	p. 185	I	2	당해 사안에서 변상금 부과행위가 이러한 개념적 징표를 각각 충족하는지 문제된다. (삭제)
41	p. 198	문제	2	계획변경승인처분 →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
44	p. 219	5		<p>** 5번 목차 내용 아래와 같이 수정</p> <p>(1) 행정절차법§26의 취지와 “2차통보서에서 행정심판·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”라는 안내문구에 비추어 甲은 행정쟁송의 대상이라고 인식하였음이 상당한바, 신뢰보호의원칙(행정기본법 §12)에 따라 규범적으로 해석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.</p> <p>(2) 또한 甲이 제출한 서류는 형식은 이의신청이나 LH공사의 1차 결정에서 거부사유가 된 진정한 소유관계에 대한 소명과 함께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증빙자료를 새로 첨부하여</p>

				제출하였는바, 이는 비록 형식은 이의신청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새로운 신청에 포섭되므로 그에 대한 L공사의 제외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귀결되어 2차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.
50	p. 246	제시문	6	<p>한편, 乙은 이미 같은 법 위반으로 2014년 5월 6일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甲이 여전히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.</p> <p>→ 한편, 乙은 이미 2014년 동법 위반으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. 그 후 2015년 5월 6일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甲이 여전히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.</p>
52	p. 257	V	1	중앙행정심판위원회 → 원처분청(국방부장관)
56	p. 272	문제	1	취소명령재결 → 취소재결
65	p. 314	문제	2	판결 → 결정
71	p. 349	II.2	5	기속력(행소법 §30①) → 형성력
72	p. 355	II.2.	1	甲 → 경원자 甲
	p. 356	5.		
	p. 357	5.		
73	p. 359	II.2.	1	甲 → 경업자 甲
	p. 360	5.		
	p. 361	5.		
77	p. 375	II.1	7	경우에 한하여 → 경우(예 : 행정재산 갱신허가 신청거부처분)에 한하여
78	p. 379	II.1	7	경우에 한하여 → 경우(예 : 행정재산 갱신허가 신청거부처분)에 한하여
		II.3(2)	2	않은다고 → 않는다고
	p. 380	V. 추가		현행 법제하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유일한 행정쟁송상의 가구제 방안은 의무이행심판(행심법§5 제3호)을 본안으로 하는 임시처분(행심법 §31)이라고 할 것이다.
96	p. 456	3.(2).1)	1	판례의 처분시설 → 판례의 처분시설(행정기본법 §14②)
100	p. 475	III.3	1	행정기본법 §15의 → 생각건대, 행정기본법 §15의
101	p. 480	III.1.(3)	3	<p>甲이 乙을 피고(행소법 §35)로 하여</p> <p>→ 甲이 乙을 피고(행소법 §13, §38①)로 하여</p>